

한국의 시장경제: 제도의 부정합성(不整合性)과 가치관의 혼란⁽¹⁾

김 병 연

최근 경제학의 발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제도, 문화, 가치관 등의 비경제학적 요인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도의 중요성을 설파한 North(1990)의 연구 이래 Acemoglu et al.(2001, 2002)의 연구 결과, 즉 유럽 정착민이 피식민지국가에 이식한 제도의 형태에 따라 그 국가들의 장기적 경제성장이 달라졌다는 발견은 제도가 경제성장에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규범과 같은 비공식제도(informal institutions)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한 구성 요소인 신뢰(trust)는 물적 투자, 교육, 기업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신뢰가 10% 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0.8% 포인트 증가한다는 추정치도 제시되었다[Knack and Keefer(1997)].

그러나 아직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정책은 제도, 문화 요인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성장 방식, 즉 물적 투자에 의한 성장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투자 대비 성장 효과가 낮은 결과, 즉 높은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제도, 문화, 규범과 같은 비경제학적 요인들이 발전되지 못한 채 이상의 방식에 의한 경제 성장을 고집한다면 사회의 제도와 문화의 정합성은 더욱 떨어지고 이는 물적, 인적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정책 관련 변수 및 제도 관련 변수를 이용하

(1) 이 글은 저작권자의 승락을 얻어 단행본 『한국형 시장 경제체제』(2014년, 이영훈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제13장을 저자가 요약 발췌하여 작성되었다.

여 한국과 다른 국가의 경제성장 결정 요인의 수준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자본, 정책, 제도가 일인당 국민소득에 걸맞게 고루 발전되어 있는 대부분의 여타 OECD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물질·인적 자본의 강국이나 정책 항목 중 일부가 낙후되어 있으며 제도의 측면에서는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타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다. 또한 제도 중에서도 경제제도는 비교적 발전된 반면 비경제제도의 후진성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제도도 각 경제제도의 수준의 편차가 큰 편이다. 예를 들어 생산 활동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제도인 기업자유도,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는 높은 반면 부패자유도, 노동자유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제도의 부정합성, 즉 어떤 경제제도는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경제모델을 따르는 반면 어떤 제도는 자유 시장경제모델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경제제도는 주로 전통적인 일본형 경제제도와 유사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시장에 의한 조정이 지배적인 영미형 경제체제와 대비하여 인적 관계를 통한 조율이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전통 사회를 기반으로 장기고용, 간접금융, 기업 간의 연결망, 낮은 노동시장 자유도, 일반 교육 제공 등이 그 체제의 구성 요소이었다. 그리고 이 구성 요소 제도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호 일관성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미국형 경제제도와 같은 이전의 경제 제도와는 다른 제도의 이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단기와 장기고용의 혼재, 직접과 간접 금융의 혼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비대칭적 연결망, 고용의 자유는 높으나 해고의 자유는 낮은 노동시장 등 어느 한 쪽의 경제제도 유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비전형적인 제도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시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도 시장을 지탱해 주는 신뢰수준은 낮은 편이며 시장에서 나오되는 개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미흡하다. 그렇다고 외환위기 이전의 전통적인 경제체제로 복귀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체제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혼란 가운데서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해 기득권 세력(인사이드)과 진입 세력(아웃사이드)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형 경제제도는 하나의 특징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경제제도가 일관성을 상실한 채 뒤섞여 있는 경제체제이다.

이러한 제도의 부정합성은 정부 주도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

치는 직접적 요인에 집중하여 정책을 편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적, 대중적, 여론 영합적으로 해결하려 한 결과가 이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의 부정합성은 한국인의 가치관의 아노말리와의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이웃, 지인,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에서 소득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과 타이완에 비해서도 신뢰 수준이 더 낮으며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도 이웃, 지인,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물질주의 지향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예를 들어 직장 선택 시 최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81%는 소득과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해 직장을 선택할 때 (평생)소득과 관련된 요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 수치는 스페인(70.9%), 타이완(65.1%)보다 훨씬 높으며 OECD 평균(53.7%)을 크게 상회한다. 직장 동료를 가장 중시해서 직장을 선택한다는 비중은 단지 5.8%로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으며 보람을 중시한다는 비중(13.2%)도 다른 국가에 비해 낮으며 OECD 국가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Hofstede의 방법론을 이용한 가치관의 평가에서도 한국인의 가치관은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가치관이 일관적이라면 개인주의 - 남성성 - 위험 선호적 - 장기지향성 - 권력불평등 비수용성 혹은 이 각각에 반대되는 특징의 조합일 것이다. 즉 각각의 숫자가 일관되게 낮은 국가, 일관되게 높은 국가는 가치관의 일관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수의 평균은 전체 국가의 평균에 가까우면서도 분산이 매우 높아 문화적 일관성이 없으며 문화적 특징이 견고하지 않다. 이는 한국인의 문화 가치는 다양한 여러 가치가 일관성이 없이 혼재된 형태임을 암시한다.

한국의 고부패와 저신뢰도 제도의 부정합성의 결과로 판단된다. 제도의 정합성이 훼손되면 어떤 규칙과 규범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그리고 적용되는 규칙과 규범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긴다. 이 혼란은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며 그 결과 자신의 가치관에도 혼란을 갖고 있는 대중은 “털어서 먼지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믿게 된다. 이로 인해 오히려 부패가 늘어나고 타인에 대한 신뢰는 감소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인의 물질주의 수준과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한 경쟁은 한국인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고양함으로써 한국이 중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는 역설적으로 물질주의와 이

를 위한 경쟁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물질주의 가치관과 이를 위한 지나친 경쟁은 타인을 신뢰하기보다 경쟁 대상으로 간주하게 한다. 그리고 물질주의가 심할수록 부패가 증가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적 비효율성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 선진국은 신뢰와 저부패, 높은 제도의 질에 기초하는 반면 한국은 이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바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다.

제도의 부정합성도 한국의 낮은 신뢰, 높은 부패에 기여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으로 투명성과 객관성, 평등성을 지향하는 제도들이 도입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어떤 제도는 전통적인 요인에 기초하여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한국 제도의 부정합성이 초래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경제 성장 위주의 제도적 구성,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영향으로 수입된 제도, 전통적 제도 등이 상호 충돌되는 현상이 바로 한국 사회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단기성과 위주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시청률과 구독률을 올리려는 일부 언론과 문화계의 센세이션날리즘, 이에 자극받은 여론의 압력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제도의 상호 정합성을 숙고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인기몰이와 땀질 식의 법과 제도를 난립시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제도의 부정합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 제도와 기존의 제도들이 상호 정합적인지, 한국인의 정신적 가치와 일관적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상호 모순적인 제도와 관행의 존재, 물질주의 편향적인 가치관은 사회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고부패와 저신뢰의 함정에 한국 사회를 계속 머물게 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정부 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방식의 정부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과 여론에 휩쓸려 앞뒤 재지 않고 도입되는 제도와 법의 과잉 현상도 사라져야 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6370

팩스: (02) 886-4231

E-mail: kimby@snu.ac.kr

참고문헌

- Acemoglu, Daron, Johnson, S., and Robinson, J. A. (2002): “Reversal of Fortune: Geography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Income Distribu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1231-1294.
- Acemoglu, Daron, Simon Johnson, and James A. Robinson (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1**, **5**, 1369-401.
-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4**, 1251-1288.
- North, Douglass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